



오늘의 주요기사

2022 11 30

섬기는 일하는 가까운
강원도의회

江原日報	07	"	"	1
江原日報		[] ()		2
江原日報	03	.		3
강원도민일보	03	"	"	4
C1방송		' , '		5
江原日報	01	" . .	"	6
江原日報	01	“ ”		6
江原日報	02	" . .	"	7
江原日報	02	" .	"	8
江原日報	01	4 .		9
강원도민일보	01	' ' ... ' '		10
江原日報	03	“ ”		11
강원도민일보	02			12
강원도민일보	06	"	"	13
강원도민일보	10	4000	가	14
江原日報	01	12 ...		15
강원도민일보	01			16
江原日報	04	“ . ”	... 17	
강원도민일보	25	16 ' 1 ' 1		18
江原日報	23	' vs '		19
江原日報	19	[] ‘ 가 ’		20
江原日報	19	[] , ‘ ’		21
강원도민일보	23	[]		22
강원도민일보	23	[]		23

2022 11 30 ()
07

江原日報

“청년 기업인들 강원경제 활력 불어넣는다”

강원청년경제인연합회 출범

도내 최초 청년 경제단체
경제 발전 조례 제안 포함
다양한 지원사업 펼칠 예정

강원도 내 청년 기업인들이 주축이 된 최초의 청년 경제단체가 29일 출범했다.

강원청년경제인연합회는 이날 춘천 스키이컨벤션에서 창립총회 및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김진태 도지사, 신경호 교육감, 권혁열 도의장, 허영국회의원, 육동한 춘천시장, 박진오 강원일보 사장, 박승균 중소기업중앙회 지역중소기업회장단협의회장, 최병수 강원지방조달청장 등 내빈들과 연합회 회원 80여명이 참석했다.

강원청년경제인연합회는 도내 55세 미만 기업인들이 주축이 돼 만들어진 도내 최초 청년 경제단체다. 도내 청년 기업인들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청년 기업의 권익을 보장하고 지역경제를 부흥시킨다는 취지로 설립됐다.

춘천시 내 학생합창단 ‘울 콰이어’의 공연으로 막을 올린 출범식은 개회선언, 출범 퍼포먼스, 경과보고 및



◇(사)강원청년경제인연합회 출범식이 29일 춘천 스키이컨벤션웨딩홀에서 박재희 초대회장, 김진태 지사, 권혁열 도의장, 신경호 교육감, 박진오 강원일보 사장을 비롯한 내빈과 청년경제인들이 모인 가운데 열렸다. 참석 내빈들이 출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신세희기자 and8729@kwnews.co.kr

설립취지서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연합회 출범과 함께 취임한 박재희 강원청년경제인연합회장은 취임사에서 “급변하는 시대에는 도내 청년 기업인들이 새로운 강원 경제 재도약의 첨병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강원 청년 경제인 모두가 행복하고 강한 경제인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선도적인 사업과 활동들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김진태 지사는 “강원청년경제인연합회가 강원 청년 경제인들이 겪는 애로사항과 성공 노하우를 공유하는 공론화 장이 돼 청년 경제인들의 동

반 성장을 이끌어 줄 수 있길 바란다”며 “강원도도 청년 경제인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청년 사업가와 사회 초년생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겠다”며 축하했다.

신경호 교육감은 “강원청년경제인연합회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 어려움을 해결하며 단결하는, 강원도의 희망의 등불이 될 것”이라며 “이번 출범식이 강원도 지역 청년 창업, 청년 안착과 관련해 성공적인 마중물이 되길 응원한다”고 말했다.

후원 언론사인 박진오 강원일보 사장은 “코로나19라는 대위기에 도 불

구하고 지역 상공업 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발전 방향을 모색한 강원청년경제인연합회 회원들의 노고에 존경을 표한다”며 “청년 기업인들이 힘을 모으고 함께 노력한다면 코로나19와 경기 침체라는 위기는 기회로 변모할 것”이라고 격려했다.

앞으로 강원청년경제인연합회는 청년 경제인 발전에 관한 조례연구 및 제안, 기업경영에 필요한 제반교육, 회원사의 법률상담, 공공기관 발주 및 구매사업에 대한 청년 경제인의 권리 강화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김현아기자

江原日報

[포토뉴스] (사)강원청년경제인연합회 출범식



(사)강원청년경제인연합회 출범식이 29일 춘천 스카이컨벤션웨딩홀에서 박재희 초대회장, 김진태 지사, 권혁열 도의장, 신경호 교육감, 박진오 강원일보 사장을 비롯한 내빈과 청년경제인들이 모인 가운데 열렸다. 참석 내빈들이 출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신세희기자



(사)강원청년경제인연합회 출범식이 29일 춘천 스카이컨벤션웨딩홀에서 박재희 초대회장, 김진태 지사, 권혁열 도의장, 신경호 교육감, 박진오 강원일보 사장을 비롯한 내빈과 청년경제인들이 모인 가운데 열렸다. 참석 내빈들이 출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신세희기자



(사)강원청년경제인연합회 출범식이 29일 춘천 스카이컨벤션웨딩홀에서 박재희 초대회장, 김진태 지사, 권혁열 도의장, 신경호 교육감, 박진오 강원일보 사장을 비롯한 내빈과 청년경제인들이 모인 가운데 열렸다. 신세희기자

2022 11 30 ()

03

江原日報

캐릭터 논란·대관령음악제 예산삭감 도마위

도의회 예결특위서도 쟁점
與 대변인실 적극 대응 요청
원주·양양공항 활성화 관련
경영상태 면밀한 점검 당부

속보=최근 불거진 강원도 대표 캐릭터 ‘범이·곰이’ 퇴출 논란(본보 지난 28·29일자 3면 보도)이 강원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도마 위에 다시 올랐다.

최재민(국민의힘·원주) 의원은 29일 예결특위 제2차 회의 대변인실 소관 예산 심사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로부터 강원도 대표 캐릭터 범이·곰이 사용 중단을 공식 요구받은 사실을 집중 점검했다. 최 의원은 “IOC는 대한체육회로 범이·곰이 캐릭터 사용 중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2024년 동계청소년올림픽 개최 준비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IOC와 갈등을 만드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야당에서 ‘전임도정 지우기’라고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도 “예쁜 캐릭터를 왜 바꾸려고 하는지 도민들은 잘못 인식할 수 있다”며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 새로 태어나는 강원도 캐릭터가 사랑받을 수 있도록 범이·곰이 캐릭터를 왜 사용하지 못할 위기에 처했는지 분명하게 말해 달라”고 적극



◇강원도의회 제315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9일 본회의장에서 열려 최재민(국민의힘·원주) 의원이 최근 교체 논란이 일고 있는 강원도 캐릭터 ‘범이·곰이’와 관련 예산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박승선기자

적인 대응을 요청했다.

문화관광국 예산 심사에선 대관령 겨울음악제 추경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을 두고 질문이 이어졌다.

최재석(국민의힘·동해) 의원은 “올해 추경예산안 대관령겨울음악제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2021년도 예산 2억원에서 올해 예산을 1억원 더 증액해 3억원을 만들었는데, 불과 1년 사이에 전액 삭감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기용 국장은 “2018평창올림픽이 겨울에 개최됐기 때문에 그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겨울음악제를 만들었다. 이제 올림픽도 끝나서 효율성을 판단해 없애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최 의원은 “대관령음악제가 내년이면 20주년이 되는 만큼 탄탄한 명성을 쌓아 왔다. 문화와 관광을 연계하는 게 요즘 추세”라며 “지난해 세웠던 계획을 다시 뒤엎는 졸속의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찬성(더민주·원주) 의원은 원주·양양공항 활성화 사업 예산이

40% 삭감된 것과 관련해 질문하면서 경영상태를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원주공항이 하청업체들을 사용한 이후 제때 비용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며 “강원도비의 지원금은 그대로 지원되고 있는데,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며 운영 상태를 살필 것을 강조했다.

한편 강원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강정호)는 30일까지 3차 회의를 진행, 다음 달 1일 마지막 절차인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운영한다. 이하늘기자

강원도민일보

2022 11 30 ()
03

도 “외부행사 취소로 범이곰이 홍보예산 삭감된 것” 해명

최재민 “IOC 갈등 안좋아”도 옹호

속보=강원도가 ‘범이곰이’ 캐릭터 홍보예산삭감에 대해 “올해 관련 외부행사가 취소돼 삭감된 측면이 크다”고 해명하고 나섰다.

김용균 강원도 대변인은 29일 315회 정례회 강원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



회(위원장 강정호) 대변인실 예산 심의에서 최재민(원주·사진)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최 의원은 2022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범이곰이 캐릭터 홍보비’ 2800만 원이 전액 삭감된 것에 대해 “전임 도정 지우기”라는 비판(본지

11월 29일자 2면)이 제기된 것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국제 올림픽 위원회(IOC)가 대한체육회를 통해 범이곰이에 대한 사용중단을 요구했고, 강원도는 수호랑반다비(평창동계올림픽 캐릭터) 2세라는 설정으로 캐릭터를 개발했다”며 “상호 유사성이 높다는 IOC 판단에 분명 법적 다툼 여지가 있다.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을 준비해야 하는데, 굳이 IOC와 갈등을 만드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강원도의 입장을 옹호했다. 그러면서 “허영국 회의원은 이를 두고 전임자 지우기라면서 전임도정의 잘못을 현 도정의 잘못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대변인실의 대응을 주문했다. 이설화

G1방송

2022 11 29 ()

강원도 마스코트 '범이, 곰이' 정치권 공방

이종우 기자 []



강원도 마스코트인 '범이, 곰이'를 두고 정치권에서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은 최근 자신의 SNS에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 캐릭터를 새로 만들겠다고 공모전을 공지했다"며,

"이해할 수 없는 처사로, 김 지사의 행보에 깔린 저의로 의심받는 동기가 '전임자 지우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강원도당은 논평을 통해,

"IOC가 수차례 범이, 곰이 사용 중단을 요구했음에도 최문순 도정이 묵살해 결국 교체를 추진하게 된 것"이라며, "전 도정이 무책임한 일 처리를 한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江原日報

2022 11 30 ()
01

“낙후·소외·규제 풀고 접경지역 새 발전모델 제시”

남북관계 긴장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접경지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접경지역지원특별법 개정을 통한 각종 규제 완화와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 민통선 북상 및 군부대 미활용 부지 활용 등 접경지역 규제 완화 특례 포함도 필요하다.

29일 인제 스피디움호텔에서 열린 ‘2022 접경지역 발전전략 포럼’에서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고성군 등 6개 시·군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은 이 같은 방안에 동의하면서 향후 접경지역을 대한민국 발전의 선봉으로 만들어 나가자고 의견을 모았다. ▶관련기사 2면

이날 포럼에서 최상기 인제군수는 “현재까지도 접경지역에는 낙후, 소외, 규제, 인구감소 등 불합리한 여러 문제가 산재돼 있다”며 “접경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군인과 지역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청년들이 터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더 많은 고민과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문순 화천군수는 “접경지역은 국가 안보를 위해 70여년 동안 피해를 감수하고 있는데 국방부는 군사

본보·道·접경지 시군 공동 ‘2022 접경지역 발전전략 포럼’

보호시설을 비롯한 각종 규제 완화로 개발을 제한하고 이제 외서는 군남 농산물까지 공개경쟁 입찰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또 다른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흥원 양구군수는 “접경지역 시·군에서는 지역특성에 맞는 특례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특별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6개 시·군 자치단체장들은 강원특

별자치도 출범에 앞서 접경지역을 새로운 관광과 협력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한 실질적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유호열 전 민주평통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접경지역 평화적 이용, 한반도 평화안정과 통일의 디딤돌’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고, 제1회의는 권혁순 강원일보 논설주간이 사회를 맡아 진행됐다. 종합토론에는 박기

준 철원군의장, 박대현(국민의힘·화천) 도의원, 박귀남 양구군의장, 이춘만 인제군의장, 김일용 고성군의장, 김인호 통일부 남북접경협력과장, 최동식 한국평화협력연구원 고문, 제성호 중앙대 교수, 홍순직 전 현대경제연구원 통일경제센터장 등이 참석해 접경지역 발전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을 펼쳤다.

박서화기자 wiretheasia@kwnews.co.kr

2면에 계속

2022 11 30 ()
01

江原日報



“접경지역을 대한민국의 선봉으로” 2022 접경지역 발전전략 포럼이 29일 인제 스피디움호텔에서 열렸다. 박진오 강원일보사장, 최상기 인제군수, 최문순 화천군수, 서흥원 양구군수, 김한수 도기획조정실장, 이춘만 인제군의장 등 내빈들과 유호열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을 비롯한 토론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인제=박승선기자

江原日報

2022 11 30 ()
02

“낙후·소외·규제 풀고 접경지역 새 발전모델 제시”

-1면에서 계속

특별좌담회에는 김준형 전 국립외
교원장과 진창수 세종연구소 수석연
구위원이 참석해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국제정세 및 평화를 위한 방안 등
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박진오 강원일보 사장은 개회사
에서 “이번 포럼은 접경지역의 현실
을 돌아보고 새로운 발전전략 및 모
델을 찾는 자리”라며 “강원도와 평
화지역 6개 시·군은 물론 지역의 다
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다층적 거
버넌스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약속했다.



◇2022 접경지역 발전전략 포럼이 29일 인제 스피디움호텔에서 박진오 강원일보사장, 최상기 인제군수, 최문순 화천군수, 서흥원 양구군수, 김한수 도 기획조정실장, 이춘만 인제군의장 등 내빈들과 유호열 전 민주평통지문회의 수석부의장을 비롯한 토론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인제=박승선기자

“주민에 실질적 보상·이득 줄 협력 절실”

유호열 전 민주평통지문회의 수석부의장 기조연설

접경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인식과 이해관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지역의 특색을 살린 실질적인 교류협력 구상이 진전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9일 인제 스피디움호텔에서 열린 ‘2022 접경지역 발전전략 포럼’에서 유호열(고려대 명예교수·사진)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이렇게 말하고,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대북구상에서는 역대 정부의 대북·통일정책과 달리 접경지가 중앙정부의 정책의 대상이나 수혜자로서만 다뤄져서는 안 된다”며, “남북 간 교류협력의 실천 공간으로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

단계·점진적 평화 유지 노력
유기적 연결 관광스토리 필요

이 주민 중심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분단 이후 주민들이 입은 피해에 초점을 맞춰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보상과 이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협력 구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이다. 이어 “남북교류협력의 중단된 이후 접경지역이 겪은 막대한 물질적, 정신적 피해와 문제점들이 보다 충실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말하고, “향후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남북 간 대립과 협력의 전초기지로서 접경지역의



또 현재 국제정세와 관련 “안보 지형의 변화와 함께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코로나19, 기후변화 등 다중적인 위기와 과제를 안고 있다”고 분석하고, “북한의 핵능력과 김정은의 핵정책 방향이 노골적이고 분명해진 만큼 과거 한반도 평화구상으로는 더 이상 우리의 안보와 평화를 보장할 수 없다”고 처방했다. 이어 이와 같은 시대에 한국 정부는 단계적, 점진적인 평화유지를

실상과 경험을 보다 체계적으로 재구성하고, 적극적으로 정책수립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해 노력해야 하며, 독일의 분단 경험을 자산으로 통일 준비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자리에서는 접경지역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관광 스토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지역 관광 발전 방안과 관련해서도 실질적인 제안이 제기돼 눈길을 끌었다. 이와 관련, 유 부의장은 “인제는 남북 간 산림협력사업을 할 수 있는 국립수목원 유치, 양구는 국립현충원 유해발굴협력단을 옮겨오고, 춘천은 통일연구원, 철원은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유치가 필요하다”며 “화천은 하나원 분원을 확대시키고 탈북민들이 적응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서화기자

江原日報

2022 11 30 ()

01

전북 4번째 특별자치도 강원 비전·특례 급하다

설치 특별법 국회 소위 통과
경기북도·충북 줄줄이 추진
정치논리 따른 나눠먹기 우려
강원특별도 특례 확대 걸림돌

내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이어 전북특별자치도 설치도 9부 능선을 넘었다.

제주, 세종, 강원, 이어 전북까지 국내 4번째 특별자치단체의 출범이 기정사실화된 데다 경기북도특별자치도 등의 설치도 추진되고 있어 특별자치도가 자칫 ‘특별함’을 잃고 정치논리에 따른 ‘나눠 먹기’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강원도는 특별자치도에 대한 비전과 특례조차 구체화하지 못하고 있어 속도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은 지난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다음 달 9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확정적이다. 국회 최종 통과 시 내년 6월에는 강원특별자치도, 12월에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연이어 출범한다.

전북특별법을 살펴보면 ‘전라북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한다’, ‘국무총리 소

속으로 전북자치도 지원위원회를 둔다’ 등의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강원특별법과 거의 모든 조항이 동일한 사실상 쌍둥이 법안이나 다름없다.

강원도와 전북도는 지리적, 지역적, 산업구조 등의 여러 측면에서 다른 여건을 갖고 있으나 특례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경쟁관계에 놓일 수 있다. 또 경기도는 경기북도특별자치도를, 충북도는 충북특별지원법을 각각 준비하고 있어 지역 간 안배와 균형을 고려해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특정지역의 특례 확대에 소극적일 수 있다.

더욱이 강원도는 아직 특별자치도의 비전과 특례도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도는 강원특별자치도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수행 중인 강원연구원에 조속한 연구결과물을 독촉하는 공문을 보내는 등 발등에 불이 떨어진 모습이다. 도는 다음 달 중 공청회를 열고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전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지역별로 차별화된 특별자치도와 특례를 발굴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다른 특별자치도와는 다른 강원도만의 특별함을 찾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대응 전략, 구체적인 특례 규정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기영기자

2022 11 30 ()

01

강원도민일보

‘특별자치도’ 난립 특례 남발...강원도에 ‘독’ 되나

행안위 전북특별자치도법 통과

4호 특별자치시·도 출범 추진

경기·충북도 관련 법안 검토중

전북특별자치도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 4호 특별자치시·도의 출범이 추진되면서 ‘특별자치도·시’의 난립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내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전북도가 강원도의 사례를 들어 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에 전면적으로 나서면서 실질적인 특례 권한 등을 담은 강원특별자치도특별법 개정안 작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강원도의 대응이 시급해졌다.

29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하 전북특별자치도법)’은 지난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강원특별자치도법이 국회를 통과한지 2개월만이다. 전북특별자치도법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게 되면, 제주·세종·강원에 이어 네 번째 특별자치시·도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특별자치도·시의 난립 문제로 고도의 자치권을 갖는 독자적인 권한 부여에 대한 동력이 상실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강원에 이어 전북까지 특별자치도법 통과가 임박하면서 난립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되는 것이다. 특별자치도가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특별자치시·도의 개별적인 특례요구로 남발로 중앙부처와의 협의가 오히려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일반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특별자치도·시가 모두 발목이 잡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여기에 강원특별자치도 등 기존 특별자치도 설치의 취지가 무색해져 강원도가 계획한 강원특별자치도 비전로드맵 수립이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 더욱이 경기도와 충청도 역시 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 중에 있어 난립을 부추기고 있다. 경기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 중이다. 충북은 특별자치도 설치를 담은 ‘중부내륙지원특별법’을 검토 중이다.

전북과 경기, 충북 특별자치도 추진에 각 정치권도 힘을 보태면서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출범을 위한 입법 작업에 난항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도관계자는 “전북특별자치도를 포함, 특별자치시·도간의 이견이나 특례요구 남발될 경우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며 “특별자치도라는 취지가 아예 무색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정승환 jeong28@kado.net

江原日報

2022 11 30 ()
03

“소선거구제 폐지하라”

여야 젊은 정치인 촉구

최재민 도의원 동참

국민의힘 최재민 강원도议원을 비롯해 정당과 정파를 초월한 청년 정치인들이 29일 ‘소선거구 폐지’ 등 선거제 개혁을 촉구했다. 여야 청년 정치인을 중심으로 출범한 ‘정치개혁 2050’은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당독식과 혐오정치를 양산하는 소선거구를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버려진 유권자의 사표 비율은 43.73%”라며 “전체 선거인 수 대비 당선자 득표율은 36.76%로 약 63%의 유권자가 자신의 대표를 갖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하늘기자

강원도민일보

2022 11 30 ()
02

중도개발공사 대표이사 후보군 압축

내일 이사회서 주주총회 일정 확정
금융·공직자 출신 등 포함 결과 주목
강원도 정기인사 방향까지도 관심

속보=강원중도개발공사 송상익 대표 이사가 사임(본지 11월 24일자 12면 등)한 가운데 차기 대표이사 선임을 놓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더욱이 연말 도청 실국장급 인사까지 예정, 도정 전반에 인사 회오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강원중도개발공사는 내달 1일 이사회를 열고, 선임대표이사 선출을 위한 주주총회 일정 등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경영진 교체를 통한 조직개편이 시급하다는 점을 감안, 이르면 내달 1

일 선임대표가 전격 선임될 가능성도 있다.

일단, 도지휘부는 중도개발공사 차기 대표이사 선임방향으로 기업인수·합병 분야를 비롯해 금융, 매각·인허가 부문에 대한 각계 인사를 압축했다. 후보군에는 공직자 출신 인사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져 최종 결과가 주목된다.

도산하기관장 인선과 맞물려 내년 1월 강원도 정기인사 방향도 주목받고 있다.

내년 1월 인사에선 국장급 승진 등 큰 폭의 변화는 없지만, 국장급 교육 파견과 복귀 등 국장급 수평이동에 따라 도 본청 조직에 일부 변화가 생긴다.

내년도 국장급 장기교육 대상은 현행대로 6명 모집이다. 이 중 일부도 본청 국장은 최근 일부 사건 등에 휘말리면서 교육대상자로 낙점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에서 복귀하는 국장급은 김태훈·강희성·백창석·김창규·양원모·윤승기 국장 등 6명이다. 이와 함께 이영일 2018평창기념재단 대외협력처장이 최근 사직, 기념재단 대외협력처장 인선도 본격화된다.

한편 올해 연말 국장급 공로연수 대상자는 조종용 원주부시장, 변상득의사관 2명이다. 박지은 pje@kado.net

강원도민일보

2022 11 30 ()

06

“채권시장 악화 레고랜드 아닌 금리인상 원인”

김진태 지사 한은 경제특강 참석
축발 요인 강원도 연관성 부인
홍경식 한은 국장 강연 이어져

김진태 도지사가 지난달부터 시작된 국내 채권시장 악화에 대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발언해 주목된다.

한국은행 강원본부(본부장 최재용)는 29일 본부 강당에서 고물가와 금리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원지역 중소기업인을 대상으로 경제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진태 강원도지사, 최재용 한국은행 강원본부장, 이금선 강원경제단체연합회 부회장 등 도내 경제 관련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번 설명회는 강원도의 요청에 의해 시작됐다. 레고랜드 사태로 인해 대한민국 채권·금융시장의 악화가 초래된 것이 아니란 것을 설명하고 자마련된 것으로 분석된다. 도는 고물



한국은행 강원본부와 강원경제단체연합회가 공동주최한 경제동향 및 특별강의가 29일 한국은행 강원본부 강당에서 ‘최근의 금융경제 여건과 통화정책 운용 현황’을 주제로 열렸다. 이날 강의에는 김진태 도지사, 최재용 한국은행 강원본부장과 강원지역 경제인, 강원경제단체연합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가와 금리상승 등의 대내외적인 요인으로 촉발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날 참석한 김진태 지사는 특강 전 발언을 통해 레고랜드와 국내 채권시장 악화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김 지사는 “지난 9월 28일 레고랜드의 개발을 맡은 강원중도개발공사의 기업회생을

신청한 후 2주 뒤인 10월 12일 채권시장 악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며 “한국은행의 빅스텝 단행과 맞물린 시기며 과연 모든 것이 강원도의 탓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2000억원 보증채무에 대해 “대한민국의 금융시장이 강원도의 채무로

인해 휘청일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탄광 속카나리아가 광부들에게 미리 위험을 알려주듯 강원도의 취약한 부분을 알려준 사례”라고 전했다.

한편 특강에서는 홍경식 한국은행 통화정책국장이 강사로 나서 ‘최근 국내 금융·경제 동향’을 주제로 강연했다. 홍경식 국장은 “내년 GDP 성장률은 1.7%로 올해보다 내년이 더 어려울 것”이라 전망했다. 또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성 악화가 시차를 두고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미분양물량 증가하는 등 주택시장을 중심으로 부동산 경기가 빠르게 둔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통화신용정책 운용 방향에 대해 “기준금리는 물가에 중점을 둔 운영 기조를 지속할 것”이라며 “금융·외환시장 불안 심화 시에는 시장 안정화 조치를 적기에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기준금리 인상 속도와 최종 수준은 물가·성장 흐름, 금융·외환시장 상황, 미금리 인상 속도 등을 고려할 것으로 예측된다. 정우진

강원도민일보

2022 11 30 ()
10

도청사 이전 4000억원 소요 지역갈등 불가피

시, 보상·개발비 880억원 추산
이전 위치 따라 도로·교통 개편
유치전 고조 갈등 최소화 과제

강원도청사 부지선정위원회의 현장 실사가 30일 진행되면서 춘천시 역 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도청사를 이전하는데 드는 비용만 800억원, 건립 비용까지 더하면 4000억원에 가까운 대형 사업인 데다 도청사 이전 부지가 확정되면 인근의 도로, 교통 상황까지 모두 개편해야 하기 때문이다. 각 읍면동 별 유치 경쟁도

치열, 어느 곳이 선택되든 지역갈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29일 본지 취재 결과 춘천시가 산출한 도청사 이전 비용은 최대 880억원이다. 이는 건립비용은 제외한 금액으로 시는 10만㎡를 기준 보상비 약 800억원, 개발비 약 800억원으로 추산했다. 강원도에서 추산한 건립 비용이 3089억원임을 감안하면 도청사 이전에만 4000억원이 소요되는 셈이다. 춘천시 관계자는 “도청사가 들어오려면 최소 7만㎡에서 10만㎡는 돼야 한다는 게 중론”이라며 “강남·강북 등 지역별 토지가격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략적으로 이 정도 수

준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자료는 갖고 있어야 해 조사했다”고 했다.

강원도청사 부지선정위원회가 30일 현장 실사에 나서는 가운데 도청사 이전을 바라보는 춘천시의 입장도 간단하지 않다. 도청사 이전은 단순히 건물 이전이 아니라 행정·금융 인프라의 대규모 이동을 뜻하기 때문이다. 이전 위치에 따라 대중교통, 도로 계획도 모두 재정비 해야 한다. 또 다른 춘천시 관계자는 “지금 중앙로와 도청을 중심으로 모여있는 기관들의 연쇄 이동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지역 내 갈등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현재 춘천에서는 옛 농기원 부지

를 중심으로 한 강북지역, 노루목저수지 일대에 도청사를 유치해야 한다는 동면, 민선 7기 때 신축 부지로 낙점된 옛 캠프페이지, 동내면 다원지구 일원 등 4곳이 도청사 유치전을 벌이고 있다. 현 청사 부지까지 포함해 5곳 중 어느 1곳이 선택되든 다른 지역의 반발은 불가피하다. 춘천시는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해 도청사 이전 사업을 추진할 때 춘천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대책도 함께 마련해 달라 요구한 상태다. 춘천시 관계자는 “춘천시는 도청사 이전에 최대한 협조하면서도 지역내 갈등을 관리해야 하는 이중 책임이 있다”고 했다. 오세현

江原日報

2022 11 30 ()
01

아침 영하 12도 ... 도 전역 한파경보

30일 강원지역에 강추위가 찾아오겠다. 강원지방기상청에 따르면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며 29일 오후 6시를 기해 도 전역에 한파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30일 아침 강원도 전역이 영하권으로 떨어지겠다.

내륙지역과 산지는 영하 10도 내외, 동해안은 영하 5도 내외까지 내려가겠다. 철원 영하 12도, 춘천 영하 9도, 강릉 영하 3도를 기록할 전

망이다. 낮 최고기온은 철원 영하 3도, 춘천 1도, 강릉 4도의 분포를 보이겠다.

하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동해안과 산지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중으로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해야겠다. 30일 아침에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면 도로에 살얼음이 생길 수 있으니 교통 안전에도 각별한 주의가 당부된다. 류호준기자

강원도민일보

2022 11 30 ()
01

오늘부터 당분간 추위

영동지역 중심 강풍까지

강원도내 전역 한파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30일부터 기온이 급격히 떨어질 전망이다. 강원기상청에 따르면 30일부터 내달 1일까지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내려가고 영동 지역을 중심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다.

30일 도내 아침 최저기온은 북서쪽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영서 -12~-8도, 영동 -5~-2도며 낮 최고기온은 영서 -3~-1도, 영동 1~4도로 예보됐다. 내달 1일은 아침 최저기온 영서 -14~-10도, 영동 -8~-4도로 기온이 더 떨어질 전망이다.

특히 지난 28일부터 내린 비가 30일 아침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면서 비가 얼어 도로 살얼음이 생길 수 있으니 교통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신재훈

“학력 향상·특례 발굴 총력전” 도교육청 교육자치 실현 착수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 설명회
학력지원관 등 정책 67개 발표

강원도교육청이 내년부터 학생들의 학력 향상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출범에 따른 교육자치 실현에 본격 나선다.

도교육청은 29일 도교육청에서 ‘2023 주요 업무계획 설명회’를 열고 내년부터 달라지는 강원교육 정책 67개를 정리해 발표했다. 올 7월 신경호 교육감이 취임 후 밝혀 왔던 계획들을 구체화해 내년 업무 계획으로 정리한 것이다.

제1정책은 ‘더 나은학력지원관’ 구축이다. 기초학력 진단부터 진로, 진학까지 학생들에게 맞춤형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목표다. 그동안은 ‘강원학생성장종합지원센터’로 불렸지만 해당 기구의 정체성을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 ‘더 나은학력지원관’으로 이름을 새롭게 확정했다. 신경호 교육감이 최우선 공약으로 앞세운 ‘학력

향상’의 대표 정책인 만큼 구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수능형 평가문항 제작 및 모의고사 확대 운영 지원, 지역별 진학지원센터 운영, 진로 진학 우수교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사업도 포함됐다.

기초학력도 강화한다. 체계적인 한글문해·기초연산 교육을 통해 조기 문해력을 확보하고, 학습종합클리닉센터를 통해 기초학력을 지원한다.

내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출범에 대비해서는 교육특례 발굴을 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지금까지 발굴한 14개 분야의 특례에 더해 교육자치 추진단과 자문단, 범교육가족 서포터즈 등을 운영해 미처 살피지 못한 사안과 제도 개선에 힘쓴다.

신경호 도교육감은 “내년도 업무계획은 저의 첫 업무계획이기도 하다”며 “더 나은 교육을 펼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원선영기자

2022 11 30 ()
25

강원도민일보

16강행 베스트 시나리오 ‘우루과이와 1골차 동반 승리’

조별리그 1무 1패로 열세

내달 3일 포르투갈 승리 필수

가나 비길땐 2골 이상 넣어야

벤투호가 16강에 진출하려면 다가오는 포르투갈과 2022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최대한 많은 골을 넣고 이겨야 한다.

포르투갈이 2연승으로 최소 조 2위를 확보하며 16강 진출을 먼저 확정지었고 2위 가나(승점 3·1승 1패·골득실 0·득점 5), 3위 한국(승점 1·1무 1패·골득실 -1·득점 2), 4위 우루과이(승점 1·1무 1패·골득실 -2·득점 0)가 마지막 한 장남은 16강행 티켓을 두고 경쟁한다.

한국과 포르투갈, 가나와 우루과이는 오는 3일 자정(한국시간) 동시에 조별리그 최종전에 나선다. 한국은 이날 포르투갈에 비기거나 지면 무조건 탈락한다. 결국 16강 진출 시나리오의 가장 큰 전제는 한국의 포르투갈전 승리다. 하지만 가나-우루과이의 경기 결과에 따라 운명이 갈린다.

우루과이가 가나에 승리한다면 한국과 우루과이는 1승 1무 1패로 승점 4동률이다. 승점이 같으면 골득실차·다득점·승자승으로 순위를 따지는데, 한국은 현재 골득실과 다득점에서 모두 우루과이에 앞서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한국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럴 경우 우루과이가 가나를 1골차로 이기는 게 최상의 시나리오다.

우루과이와 가나가 비길다면 우루과이는 탈락하고, 한국과 가나가 승점 4



동률을 이루게 된다. 이 경우 골득실과 다득점을 따져야 하는데 무승부를 기록한 가나는 골득실이 그대로 0이다. 이때는 한국이 포르투갈을 상대로 2점차 이상 승리해야 한다. 그래야 골득실에서 가나를 앞선다. 골득실마저 같다면 다득점을 따져야 하는데 현재 가나의 총득점이 한국보다 3점이나 많다. 최악은 한국이 포르투갈전에 승리했지만 가나가 우루과이를 꺾는 것이다. 이 경우 가나가 승점 6점으로 포르투갈과 함께 16강에 진출한다.

한편 외국 배팅 업체들이 한국의 16강 진출을 낮게 전망했다. 배당률을 살

펴보면 외국 배팅업체 윌리엄 힐은 우루과이가 16강에 진출할 경우 배당률을 5/6, 가나 5/4, 한국 8/1로 책정했다. 이는 우루과이가 16강에 오른다는 예상이었으면 1달러를 걸었을 때 1.83달러를 받는다는 의미다. 1달러를 걸었을 때 기준으로 가나는 2.25달러, 한국은 9달러를 돌려받는다. 다른 배팅업체 레드브룩스는 우루과이 10/11, 가나 6/5, 한국 7/1을 책정했다. 윌리엄 힐과 비슷한 정도로 우루과이, 가나의 16강 가능성은 비슷하고 한국은 좀 떨어진다는 예상이다.

심예섭 yess@kado.net

江原日報

2022 11 30 ()

23

‘손흥민 vs 호날두’ 뜨거운 캡틴 전쟁

2022 카타르 월드컵 한국 축구 대표팀의 운명이 결정될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세계적인 두 공격수의 ‘정면충돌’이 벌어진다.

한국은 다음 달 3일 0시(한국시간) 카타르 알라이얀의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포르투갈과 월드컵 조별리그 H조 3차전에 나선다.

한국은 지난 24일 1차전에서 우루과이와 0대0으로 비기고, 28일 2차전에선 가나에 2대3으로 패한 뒤 H조 최강자인 포르투갈을 만난다.

가나(3대2)와 우루과이(2대0)를 연파한 포르투갈은 H조 선두(승점 6)로 16강 진출을 조기 확정했고, 한국은 포르투갈, 가나(승점 3)에 이어 3위(승점 1)에 자리했다.

한국이 16강에 진출하려면 최종전에서 무조건 포르투갈을 잡은 뒤 우루과이-가나전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이번 경기는 조별리그 성적을 결정하는 최종전이라는 의미가 물론 크지만, 대진이 결정됐을 때부터 ‘스타 군단’ 포르투갈을 만나는 자체가 관심을 끌었다.

특히 양 팀의 주장 손흥민(30·토트넘)과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7·마드리드)의 격돌은 경기 최고의 관전 포인트다.

한국 내달 3일 포르투갈과 운명의 조별리그 최종전

무조건 다득점 승리 후 가나-우루과이전 결과 따져야
나란히 등번호 ‘7번’ 두 스타 A매치 첫 대결 시선 집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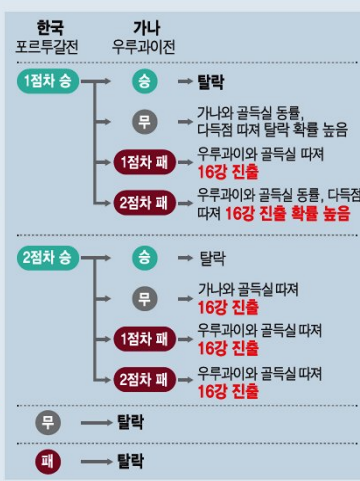
한국 16강 진출 경우의 수

11월 29일 국가별 2차전 종료 현재 순위

	승	무	패	득실차	승점
16강 확정 포르투갈	2	0	0	3	6
가나	1	0	1	0	3
한국	0	1	1	-1	1
우루과이	0	1	1	-2	1

1차전	우루과이 0:0 한국
	포르투갈 3:2 가나
2차전	한국 2:3 가나
	포르투갈 2:0 우루과이
3차전	한국 - 포르투갈
	가나 - 우루과이

12월 3일 0시
※ 골득실 같을 경우 다득점 따져 결정, 다득점도 같을 경우 승자승으로 결정, 무승부 시 페어플레이 점수로 결정



많은 축구 선수가 ‘롤 모델’로 여기는 호날두를 손흥민도 우상으로 여기며 ‘월드 클래스’로 성장했다.

손흥민은 여러 기회를 통해 호날두에 대한 선망을 드러내 왔다.

유럽 무대에서 맹활약하며 그예겐

‘손날두(손+호날두)’라는 별명이 붙은 적도 있다. 호날두처럼 소속팀과 대표팀에서 모두 7번을 단 손흥민은 호날두가 세계 최고의 선수로 발돋움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에 진입해서도 진화를 거듭, 2021~

2022시즌 아시아 선수 최초로 득점왕까지 올라 2007~2008시즌 득점왕 호날두의 발자취를 따랐다.

국가대표팀에서 ‘에이스’이자 주장이라는 점도 닮은꼴이다.

손흥민은 차근차근 경력을 쌓아 나가며 파울루 벤투 감독 체제에서는 주장으로 탑을 이끌고 있고, 올해 6월 A매치 100경기를 돌파하는 ‘센추리 클럽’에도 가입(현재 106경기 35골)했다. 2003년부터 포르투갈 성인 대표로 뛰며 2008년부터 주장을 맡은 호날두는 A매치 193경기에서 118골을 기록 중이다.

이들이 A매치에서 만나는 건 처음인데, 호날두의 나이를 고려하면 마지막이 될 수 있는 만큼 손흥민으로선 우상의 앞에서 진가를 내보이고 지금은 자신의 시대라는 걸 알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을 터다.

이번 대결을 앞두고 포르투갈이 이미 16강 진출을 확정된 점은 변수로 꼽힌다. 포르투갈이 단단 승부에 대비해 로테이션을 가동할 가능성도 있어 이 경우 호날두가 휴식을 취할 수도 있다. 하지만 조 1위가 완전히 굳어지지 않은 만큼 G조 선수가 유력한 ‘우승 후보’ 브라질과 16강에서 만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포르투갈도 마냥 힘을 뺄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江原日報

2022 11 30 ()
/ 19

‘테슬라 기가팩토리 강원도 유치’ 성공하려면

강원도가 테슬라의 전기차 제조공장인 ‘기가팩토리’ 유치를 선언했다. 기가팩토리가 유치될 경우 강원도의 산업지도를 바꿀 수 있는 신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진태 지사는 지난 28일 기자간담회에서 “테슬라 공장을 강원도에 유치하기 위해 나서겠다”며 “테슬라 코리아에 강원도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가 테슬라 공장 유치에 나선 것은 지난 23일 윤석열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와의 화상면담에서 윤 대통령의 투자 요청에 대해 머스크가 “한국을 최우선 투자 후보지 중 하나로 고려하고 있다”고 화답한 것이 계기가 됐다.

테슬라는 미국 프레몬트(캘리포니아)와 오스틴(텍사스), 중국 상하이, 독일 베를린 등 네 곳에서 완성차 공장을 가동 중이다. 지난해 93만 대를 만든 테슬라는 2030년엔 2,000만 대를 생산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생산기지가 필요한 이유다. 테슬라는 연간 150만~200만 대를 생산할 아시아 제2의 전기차 생산기지를 검토하고 있다. 국내 최대인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연간 160만 대 생산)과 비슷한 규모다. 최종 결정은 내년 상반기에 나올 전망이다. 한국과 함께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등 4개국이 주요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한국의 강점으로는 잠재력이 큰 내수시장, 배터리 등 부품 공급망, 세계적인 FTA망 등이 꼽힌다. 여기에 최근 글로벌 제조기업은 저임금국가에서 만들어 수출하던 과거 흐름을 바꿔 구매력이 크고 수요가 많은 곳으로 직접 진출하는 전략을 펴고 있다. 테슬라도 유럽 내 공장을 동유럽이 아니라 자동차 본고장 독일 베를린에 짓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테슬라 공장을 유치하는 일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 국내의 경우 자원이나 인건비, 시장 규모, 노조, 규제 등이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강원도를 최적의 후보지로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먼저 테슬라의 기대치를 만족시킬 수 있는 법적·제도적 지원방안은 물론 강원도가 테슬라가 추구하는 기업적 가치와 맞아떨어질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다행히 올 7월 김경호 테슬라 코리아 대표가 ‘강원도 친환경 모빌리티 성지화’를 김 지사에게 제안하며 직접 투자 의지를 보였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 도는 조만간 유치전담팀을 구성한 후 산업통상자원부, 코트라와 관련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테슬라의 강원도 상륙이라는 큰 성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江原日報

2022 11 30 ()
/ 19

접경지역 활성화, '특례 법안' 관철에 달렸다

강원도 접경지역은 저미는 분단의 아픔이 여전한 현장이고 유례가 드문 군사밀집지역이다. 당연히 갖은 규제가 중첩되면서 낙후와 희생의 땅을 운명으로 감당한 애잔한 땅이기도 하다. 한편으로는 수십년 민간인 출입이 제한되면서 세계적인 청정 생태지역으로 남게 되는 역설 아닌 역설도 만들어졌다. 혹자는 '냉전이 만든 설치 예술'이라고까지 한다. 접경지역은 지난 70여년간 국가 안보를 지키는 중추적인 역할을 해 왔으며, 군사분계선과 인접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불편과 고충을 감내하면서도 자부심을 갖고 이 땅을 지켜왔다. 그러나 국가 안보에 대한 부담은 접경지역에 집중되며 다른 지역보다 개발이 제한돼 왔다.

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등 강력한 규제를 중복적으로 적용받고 있어 지역개발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로 인해 낙후된 인프라는 주민의 불편함을 가중시켜 왔으며, 지역의 최대 위기인 인구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접경지역의 문제는 이처럼 과거의 슬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한편, 새롭게 펼쳐질 남북교류의 중심지역으로서 미래 비전을 밝히는 것이어야 한다.

강원일보사가 29일 인제 스피디움에서 강원도와 춘천시를 비롯한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과 공동으로 2022 접경지역 발전전략 포럼을 개최한 참뜻이다. 이날 포럼에서 단체장들과 의회 의장들은 소통을 바탕으로 접경지역 발전을 위해 공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단체장들과 의장들이 이해관계를 넘어 한자리에 모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상생이자 동행이다. 포럼의 열기는 접경지역의 힘을 스스로 신뢰하고 희망을 갖는 좋은 계기가 됐다. 접경지역의 단체장들과 의장들이 힘을 모으면 어떠한 난관도 극복해 나갈 수 있다. 접경지역 주민의 삶의 질적 발전을 확보하기 위한 진정한 고뇌와 성찰이 필요한 이때 단체장들과 의장들의 지역 발전을 위한 '공조 약속'은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큰 기대를 갖게 한다.

이에 앞서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으로 구성된 행정협의체는 지난 23일 도청에서 열린 각 지자체 단체장과 김진태 지사와의 면담을 통해

2022 접경지역 발전전략 포럼 인제에서 열려 단체장·시군의장, 지역 발전 철저한 공조 다짐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간소화 등 제안

공동 발굴 특례안이 담긴 건의문을 전달했다. 협의체는 건의문을 통해 우선 군부대 급식 접경지역 농축산물 우선 구매 의무화와 접경지역 수산물 복합유통시설 건립 특례, 국방개혁으로 발생한 미활용 군부대 부지 처분 특례, 미활용 군용지의 영구 시설물 축조 기준 개선안 반영을 도에 요청했다. 또 접경지역 사회기반시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간소화 및 공장설립 제한지역 규제 완화 등도 제안했다. 접경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이 같은 특례들이 반영돼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리고 접경지포럼과 행정협의체에서 나온 대책들이 문제 제기 수준에서 벗어나 실천력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강원도민일보

2022 11 30 ()
/ 23

옛 철 생산지 심층 조사를

-동해시 상월산 '쇠부리터' 역사학계 연구·확인 필요

동해시 상월산 일대에서 선대 철 생산지로 추정되는 '쇠부리터'가 여러 곳 발견됐습니다. 철 생산지가 확인된 것은 흔치 않은 일이라서 학계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동안 유적·유구를 찾지 못해 파악하기 힘들었던 제철 현장의 면모를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연대를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한반도 철 생산의 역사를 증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사지 등 지역 명소로도 자리매김할 수 있어 주민들의 기대가 큼니다.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유적으로 평가받기 위해선 철 생산 여부와 시기 등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최근 동해시 고대 제철연구소는 동해 상월산~연철선령~두타산을 잇는 백두대간 마루금 일대에서 여러 기의 쇠부리터를 발견해 현장을 보존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소는 제철 유적 조사·연구를 위해 지난 10여년간 유적·유구를 찾기 위한 노력과 함께 옛 문헌 조사를 병행해왔습니다. 이번에 발굴조사·실증을 위해 철 생산용 '고로터(쇠부리터)'를 공개했습니다.

연구소는 사료에 근거해 상월산에서 두타산 사이 해발 900여m 지역은 원삼국시대 고구려와 신라의 경계지점으로 격전을 치르던 전쟁터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일대에서 철광석을 달궈 철을 뽑아내는 1차 제련 공정에 해당하는 '쇠부리터'가 최소 4개 이상 발견된 것입니다. 반지름 100~120cm 크기의 둥근 형태를 한 터 안에는 진흙으로 만든 노(爐)의 흔적과 철을 제련할 때 생긴 슬래그 덩어리가 남아 있습니다. 철기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철편자, 칼, 휴대용 솥돌 등 유물들이 남아 철 생산 제련 장소 가능성이 높고 있습니다.

이미 동해시는 2011년 송정동 41만여㎡ 구역을 철기시대 집단 취락지로 보고 문화재 발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때 대·소형 주거지와 소형 유구 등 유적과 쇠화살촉·은제장신구 등 철기류 유물이 출토, 강원도 기념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당면한 연구 과제는 쇠부리터의 시대를 규정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원삼국시대의 것인지, 혹은 조선시대 제련장소인지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고고학계를 중심으로 한 전문적인 조사와 연구가 뒤따라야 합니다. 문헌 검토와 현장 조사, 과학적인 연대 분석 등 비용과 시간을 필요로 하는 작업을 필요로 합니다. 지자체도 예산 지원을 통해 향토 문화의 가치를 재조명해야 할 것입니다.

강원도민일보

2022 11 30 ()
/ 23

인원 관리도 안되는 헬기 탑승이라니

-인명 피해에 되레 산불 야기하는 사고 예방 철저해야

양양 어성전리에 추락한 헬기 탑승자 신원이 사고 이틀 만에야 모두 확인됐습니다. 당초 비행계획서에는 2명 탑승으로 기재됐으나 사망자가 5명으로 늘어나면서 신원 확인을 위해 DNA 감정을 의뢰하는 등 소동을 겪었습니다. 이번 양양 헬기 추락사고로 탑승인원 관리를 비롯해 블랙박스 미설치 등 여러 문제점이 노출되었습니다.

추락한 헬기는 속초·고성·양양 3개 시군이 민간 항공기업체로부터 공동 임차해 운용 중입니다. 사고 당일도 산불 예방 계도 활동을 위해 비행하던 중 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동해안에 큰 재난을 초래하는 산불 예방이라는 공적 임무를 수행하는 산악헬기 운영 시스템이 탑승인원조차 제대로 관리되지 않을 정도로 허술했음을 드러냈습니다. 갑작스럽게 불의의 사고로 생명을 잃은 피해자의 신원을 즉시 파악하지 못해 사망자와 유가족에게 돌아킬 수 없는 슬픔을 안겼습니다.

사고 헬기는 탑승제한 인원이 18명 이어서 5명 탑승에 무리는 없지만, 공적 목적이 뚜렷해야 합니다. 항공업체 측은 비행계획서에 신고한 인원과 실제 탑승인원 일치 여부 확인은 전적으로 통제 권한이 있는 '기장 책임'이라고 밝혔습니다. 업체 측은 비행 등에

관한 교육을 하고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기장 개인에게만 온전히 권한과 책임을 한정하는 것은 위험의 소지가 있습니다. 기장 책임과 동시에 시스템적으로 보완하는 장치가 분명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기장 개인의 판단에만 맡긴다면 앞으로 이런 사고는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 사고 원인과 경위를 규명하고 있지만, 문제는 헬기에 비행기록장치인 FDR(통칭 블랙박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점입니다. '사람이 아닌 화물 운송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항공기 사용 사업업체가 반드시 달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업체 측은 설명했지만, 블랙박스 미설치는 아쉬운 지점입니다.

산불 예방과 진화를 위해 헬기 이용은 매우 중요합니다. 험한 산악지형의 강원도에서는 상시 헬기를 이용하기에 탑승자들은 안전 우선 원칙으로 운용해야 합니다. 사고와 직결된 블랙박스는 지자체 임대 조건에서 중요한 확인 사항입니다. 이번 사고로 인한 화재는 1시간 여만에 진화됐지만, 헬기 사고가 인명 피해에 산불 확산을 초래할 수 있기에 지자체는 노출된 여러 문제점 개선과 대응에 철저해야 합니다.